

##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Chen Yi-Chen  
(Taipei Women's Rescur Foundation)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전쟁에 대한 배상요구에 관한 책임을 모두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 배상은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들, 식민지 시기에 보통 시민들이 한 저축과 보험 등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 배상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위의 일본정부의 배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그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상징적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간기금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공식적인 사죄도 물론 피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UN인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헤이그의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려는 과정을 밟고 있다.

타이완은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UN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힐 국제적인 지위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은 열심히 일해 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제적인 포럼이나 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위안부에 대한 배상 전략으로, 나는 군인으로 징발되었던 타이완 시민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배상의 과정과 경험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2차 대전 중 207,000명이 넘는 타이완 남자들이 일본군대와 군속으로 징발되었다. 그 중 25%에 해당하는 53,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전쟁후 배상법은 일본국적에 한해 적용되었고, 식민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인들의 배상요구는 일본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던 것이다.

1977년 8월, 타이완의 인권활동가, 일본인 학자, 공무원, 그리고 일본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7명의 그룹은 14명의 타이완 전 군인들이 동경지방법원에 일인당 5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도록 돕게 되었다. 1992년까지의 15년간 3번의 소송에서 3번 다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패소에서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일본군대에 징발되었던 타이완인들의 배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일본의 정치권에서 로비활동을 벌였다. 이 위원회의 고문에는 일본의 국회의원과 다른 정치권 인물도 있었다. 정치적인 로비활동이 법적인 소송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 1985년 두번째의 패소가 있었을때, 일본국회에 “배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년간의 활동이 있는 후 일본국회는 1989년 9월, “전쟁시 죽은 타이완인 유족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중순, 일본국회는 전쟁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인당 200만엔을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돈은 다음해 9월, 타이완 적십자사의 협력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로비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과 법적인 과정이 정치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은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국내의 여론과 국제적인 여론을 이용하고 국회에 영향을 줄 로비그룹을 만들어서, 정부가 위안부들을 위한 공식적인 배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올해 내로 배상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희망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개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마침내 일본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